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 필수용어사전

2024
김중규
VOCA
선행정학

2024 VOCA 선행정학을 펴내며...

행정학은 가히 용어와의 전쟁이라 할 만큼 생소하고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를 모두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주요 흐름에서 핵심용어들의 의미를 모르면 행정학을 쉽고 올바르게 공부하기가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다른 학문에서 접해보았던 용어라 할지라도 행정학에서는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사전은 행정학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위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행정학 용어들을 수험 행정학적 관점에서 알기 쉽게 풀어 쓴 대한민국 최초의 수험 행정학 용어사전입니다.

행정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용어들을 올바르게 쉽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과 버전으로 알기 쉽게 재정 의하고, 거기에다가 각 용어들이 행정학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행정학적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전에 정의된 개념들은 국어사전적 정의나 다른 학문에서 정의하는 개념들과는 의미가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은 수년간 일선에서 행정학을 지도해 온 저자의 경험과 수험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질문 내용들을 토대로 가급적 많은 용어들을 쉽게 풀어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용어는 한자와 영어를 함께 병기하여 그 의미가 최대한 정확히 전달되도록 입체적으로 편집하였으며, 본문 내용 중 ㉠은 예시어, ㉡는 유사어, ㉢는 반대어, ㉣는 찾아가기(연관용어)를 의미합니다.

행정학을 공부하실 때 곁에 두고 찾아보면서 공부하신다면 행정학이 훨씬 쉽고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특히 행정학 입문자나 인문사회 기초가 부족한 수험생들이나 이해위주로 공부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VOCA 선행정학으로 행정학을 쉽고 재밌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023. 1. 20.
카스파 연구실에서 저자 김종규

Contents

ㄱ	6
ㄴ	57
ㄷ	63
ㄹ	75
ㅁ	77
ㅂ	89
ㅅ	108
ㅇ	141
ㅈ	175
ㅊ	231
ㅋ	239
ㅌ	241
ㅍ	249
ㅎ	256

□ 가결정 假決定

파면·해임·직권면직 등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소청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 보충을 못하게 유예하도록 하는 임시결정

□ 가변비용-가변효과분석 可變費用-可變效果分析

비용효과분석에서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사업간에 우선순위를 비교하는 분석기법. 비용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효과를 금액으로 표시하지 않는 비용효과분석으로는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의 분석이며, 이 경우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해야 함 (→ 고정비용-고정효과분석)

□ 가상조직 假想組織 virtual organization

정보기술과 전자적 의사소통의 발달에 기인하여 발달한 유기적 조직으로 전자공간(on-line)에서의 네트워크화된 조직. 네트워크조직의 일종으로 IT기술의 사용을 통하여 가상조직의 구성원들은 공유된 목표를 지니고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학습조직

□ 가예산 假豫算 provisional budget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최초 1개월 이내의 예산을 의회가 임시로 의결해주는 예산. 우리의 경우 제1공화국 때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준예산제도 채택

□ 가외성 加外性 redundancy

불확실한 상황이나 위기에 대비하여 중첩이나 여유분을 두어야 한다는 행정이념으로 1960년대 말 M.Landau가 주장. 여러 기관이 한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중첩(overlapping)과 동일한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duplication), 주된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할 때 보조기관이 이를 대신 해주는 여유분(동등잠재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 (→ 능률성)

□ 가정분석 假定分析 assumption analysis

정책문제를 구조화(정의)하는 방법 중 하나로 문제상황의 인식을 둘러싼 여러 대립적인 가정(가설)들을 창조적으로 통합하는 방법. 가정이 다르면 문제도 달라진다는 전제하에 출발한 것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하는 가장 포괄적인 분석

□ 가치 價値 value

사회나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바람직한 것. 옳고 그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행정학에서는 목표 설정이나 정책 결정 등의 정치적·규범적 활동을 의미 (→ 사실)

는 생산량을 늘리면 평균비용이 줄어들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비용 (↔ 변동비용)

□ **고정비용분석** 固定費用分析

비용효과분석에서 비용이 서로 동일한 사업간에 효과의 크기만을 비교하는 분석기법 (↔ 가변비용분석)

□ **고정효과분석** 固定效果分析

비용효과분석에서 효과가 서로 동일한 사업간에 비용의 크기만을 비교하는 분석기법 (↔ 가변효과분석)

□ **고충처리** 苦衷處理 adjustment of grievance

공무원이 근무조건 · 인사관리 · 신상문제나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표시하는 불만인 고충(grievance)을 심사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 소청심사와 달리 구속력이 없음

□ **고층구조** 高層構造 tall organization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하간 수직적 분화(전문화)가 많이 이루어진 조직으로 계층의 수가 많은 조직. 대개 고전적인 기계적 구조가 고층구조임 (↔ 저층구조, 평면구조)

□ **공개경쟁승진** 公開競爭昇進 open competitive promotion

부처 구분 없이 공개경쟁에 의한 승진으로 우리의 경우 5급으로의 승진에 한하며, 합격자의 임용절차는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절차에 준함

□ **공개경쟁채용** 公開競爭採用 open competitive employment

자격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원할 기회를 주고 경쟁시험을 통해 임용후보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실적주의에 입각한 현대 인사행정하에서 강조하는 신규임용 원칙 (↔ 경력경쟁채용(과거 특별채용))

□ **공공가치관리론** 公共價值管理論 public value mgt. theory

공공부문은 기업적 가치(효율 등)보다 공공가치(공익, 형평, 민주, 대응 등)를 추구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2000년대 들어 주목받고 있으며, 다음 두 이론이 포함됨.

- (1) 공공가치실패론 : 시장이나 시장원리를 통해서는 공공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는 이론(B.Bozeman)
- (2) 공공가치창출론 : 공공부문은 공공가치를 적극 창출해야 한다는 이론(Moore)

□ **공공거버넌스** 公共~ public governance

신공공관리론 및 시장거버넌스에 대한 반론으로, 정부 · 기업 · 시민사회의 네트워크에 의한 정책결정 및 집행을 중시하는 정책네트워크형 거버넌스. 민간협력적 통치현상으로 공공부문은 시장과 다르다고 보고 사적(민간)기법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뉴거버넌스나 신공공서비스에서 중시하는 거버넌스 (= 민주거버넌스) (↔ 시장거버넌스, 효율거버넌스)

□ **공공관계** 公共關係 public relations

정부가 국민에게 정부시책을 적극 알리는 활동. 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한 공중의 태도를 평가하고 정부의 시책 · 사업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협조를 얻기 위한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활동.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정보공개와 다름 (= 행정PR)

□ 공공금융부문 公共金融部門

공공성은 띠지만 통합예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시중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재정부문(예) 공기업이나 금융성기금 등) (→ 비금융공공부문)

□ 공공기관 公共機關

공공성이 강한 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을 말하지만 법률마다 그 범위와 개념이 다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나 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을 의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자치단체는 물론 공기업이나 복지법인, 각급학교까지 포함됨

□ 공공기관 평가 公共機關 評價

공공기관의 특수성 고려 및 평가의 객관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외부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업무성과에 대해서 실시하는 평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아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을 말함

□ 공공부조 公共扶助 social assistance

국민의 생존권보장 차원에서 개인부담 없이 국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하여 국가책임하에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무기여적 사회보장활동(예) 의료보호, 생활보호 등) (= 공적 부조)

□ 공공비영리기관 公共非營利機關 public non-profit organization

가게나 기업에 대해서 무상 또는 생산비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부에 대하여 공공행정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주체로 일반정부부문에 포함됨 (= 준정부기관)

□ 공공선택이론 公共選擇理論 public choice model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법. 행정을 공공재의 공급과 소비관계로 파악하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자, 국민은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장에서처럼 시민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공공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 경제학적 관점에 의하여 정부실패를 설명한 이론

□ 공공신탁이론 公共信託理論 public trust doctrine

자연자원이나 환경 등이 현대대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류가 잠시 맡긴 것이듯이 국가의 권력이나 행정권도 관료나 정치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주권주의에 의하여 국민들로부터 수임받은 것이라는 입장.

□ 공공이익집단론 公共利益集團論

특수이익보다는 공익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이익집단의 이익이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이론. 활동적 소수(active minority)의 폐단을 우려하며 이익집단론(초기의 다원론)을 비판했던 이익집단 자유주의에 대한 반론

□ 공공재 公共財 public good

배제성과 경합성을 띠지 않는 재화로서 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공적인 재화나 서비스(예) 외교, 국방, 치안, 등대 등) (= 집합재) (= 공공서비스) (→ 사적재)

□ 공동체주의 共同體主義 communitarianism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에 반대되는 정치사상으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의 입장을 절충한 중도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 20C 후반 등장한 거버넌스 등의 사회관 (↔ 개인주의, 신자유주의)

□ 공동행동의 복잡성 共同行動~ 複雜性

정책을 집행하는 일은 여러 단계를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복잡해지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Pressman & Wildavsky가 오를랜드사업의 실패사례를 대상으로 연구한 <정책집행론(1973)>에서 정책집행의 특징으로 강조한 말

□ 공로보상설 功勞報償說

공무원연금의 본질에 관한 학설의 하나로 연금이란 재임 중의 공로를 국가가 은전을 베풀어 보상하는 것이라는 입장. 이러한 입장을 위한 독일·영국의 경우 연금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비기여제를 취함 (= 은혜설) (↔ 처치보수설)

□ 공리적 조직 功利的 組織 utilitarian organization

공리(公利)란 공명과 이득이라는 의미로 조직은 돈이나 물질적 보상을 주요 권력수단으로 하며, 개인은 타산적(계산적)으로 조직에 복종하는 이혜타산적인 조직 (🕒) 경제목표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체나 평상시의 군대)

□ 공리주의 功利主義 utilitarianism

19세기 중반 영국 제러미 벤담(J.Bentham)이 주장한 사상으로 옳고 그름의 가치판단기준을 개인의 효용과 행복의 증진에 두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윤리적 행위의 궁극 목적이라는 입장.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면 그만이라는 목적론(상대론)적 가치관. 공리란 공명과 이득을 의미

□ 공모직위제도 公募職位制度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직위별로 임용자격요건(직무수행요건)을 미리 정해 놓고 결원발생시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정부 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임용하는 개방형 인사제도. 재직지만 임용가능하다는 점에서 민간인도 임용가능한 개방형직위와는 다름

□ 공무원단체 公務員團體 public employee organizations

공무원의 권익을 존중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공무원 노동조합 (= 공무원노조). 2021. 7.6.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가 6급 이하에서 전직급 및 퇴직자 등으로 확대되었음

□ 공무원 보수결정의 기본원칙 公務員 報酬決定~ 基本原則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다음 두 가지가 있으며 이 중 대외적 균형(비교성)의 원칙이 더 우선

- (1) 대외적 균형(비교성)의 원칙 : 공무원의 보수는 사기업의 보수와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공무원 보수 민간준거의 법칙
- (2) 대내적 균형(상대성)의 원칙 : 보수액은 업무의 곤란도나 책임도 등 그 상대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차

□ 내용분석 内容分析 content analysis

시험의 타당도 중 내용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 시험내용과 직무내용을 전문가가 분석하여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시험내용은 문항검증, 직무내용은 직무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여 상호 비교

□ 내용(욕구) 이론 内容(欲求) 理論 content theories

욕구의 충족과 동기부여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욕구의 내용 규명에 중점을 두는 동기이론. 인간의 행동은 욕구 충족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봄(❌) 합리적 경제인, 사회인, 자아실현인, 복잡인 등의 모형(↔ 과정이론)

□ 내용적 합리성 内容的 合理性 substantive rationality

수단의 목표성취에의 기여여부를 의미하는 합리성. 목표와 행위(수단)간 인과성을 의미하는 결과적·객관적 합리성. Simon은 인간의 인지능력상 한계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이러한 내용적 합리성을 포기하고 절차적(제한된) 합리성을 중시 (= 실질적 합리성) (↔ 절차적 합리성)

□ 내용타당도 内容妥當度 content validity

시험내용이 직무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능력요소들, 즉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 비서요원 선발에 있어서 타이핑 능력, 전화응대 능력 등을 알아보는 것). 시험내용과 직무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분석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임

□ 내재적 책임 內在的 責任 internal responsibility

외부적인 힘이 아닌 관료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기준에 의한 비제도적 책임 (↔ 외재적 책임)

- (1) 직업적·관료적·기능적 책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판단기준
- (2) 주관적·자율적·재량적·심리적 책임: 관료의 양심이나 직업윤리 등 내적 충동이 판단기준이 되는 책임

□ 내적 타당도 內的 妥當度 internal validity

측정의 결과가 특정상황하에서 타당한지의 여부. 조작화된 결과에 대하여 찾아낸 효과가 다른 경쟁적인 원인(외생변수)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조작화된 처리(원인변수)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 즉 실험의 정확도(정책과 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추론의 정확도)로서 측정이나 평가에서 1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생명과도 같은 타당도 (↔ 외적 타당도)

□ 넛지이론 nudge theory

구성원의 인지오류와 행동편향에 의한 비합리적 의사결정(행동적 시장실패)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부드러운 개입주의. 강압·유인·규제 등 전통적인 직접개입보다 정부는 넛지라는 정책수단을 이용한 선택설계자로서의 역할 수행

□ 네거티브 시스템 negative system

자유 또는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금지시키는 규제 또는 입법방식(법에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규제가 최소화되는 민주적·현대적 입법방식. 규제 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방식 (↔ 포지티브 시스템)

- **동질적 집단** 同質的 集團
 조직내 집단들의 성격이나 문화·신념 등이 서로 유사하여 갈등이 없고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의 집단관계. 업무처리의 신속성은 높으나 창조성은 낮아짐 (→ 이질적 집단)
- **동질적 환경** 同質的 環境
 환경의 구성요소의 수가 적고 신뢰·협력관계인 단순한 고전적인 환경
- **동태적(성)** 動態的(性) dynamic
 움직임이 있는, 불확실한 환경이나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미리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유동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상태 (↔ 정태적)
- **동태적 보수주의** 動態的 保守主義 dynamic conservatism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환경이 변화하여 행정조직이나 정책이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승계하여 조직이나 정책을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관성. 감축관리의 저해요인
- **동태적 조직** 動態的 組織 dynamic organization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성과 기동성을 갖는 동적인 유기적 구조 (↔ 정태적·기계적 조직)
- **동형화** 同形化 isomorphism
 특정 조직이나 제도가 주변 조직이나 제도를 닮아감으로써 형태가 서로 유사해지는 현상. 사회환경에의 적응을 중시하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등에서 중시하는 현상. 강압적 동형화(압력), 모방적 동형화(자발적 벤치마킹), 규범적 동형화(전문가 집단)가 있음 (= 배태성)
- **등급** 等級 grade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나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직위의 횡적인 군)
- **동량소비** 等量消費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양의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현상으로 공공재의 소비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성 (= 비분할성, 집합소비성)
- **(동)등잠재력** (同)等潛在力 equi-potentiality
 가외성의 일종으로 주된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할 때 보조기관이 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역량 (= 여유분)
- **등종국성** 等終局性 equifinality
 구조·기능·절차는 다양하더라도 결과는 같음. 상이한 시작조건과 진로·방법을 통하여도 결국에 가서는 동일한 최종성공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으로 유일최선의 문제해결 방법은 없다는 현대 개방체제나 상황적응론적 인식 (= 이인동과성(異因同果性), 동일귀착성)

□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financial independence rate

총재원(자주재원 + 의존재원 + 지방채) 중에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총세입. 실질적 재정상태나 재정규모를 알려주지는 못함

□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financial autonomy rate

총세입(자주재원 + 의존재원 + 지방채) 중에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세수입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총세입

□ 재정조정교부금 財政調整交付金

광역시나 특별시·도가 관내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조정제도. 시세(보통세)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관내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는 자치구조정교부금과 시·도가 관내 시·군에 교부하는 시·군조정교부금이 있음

□ 재정준칙 財政準則 code for fiscal stability

재정건전성지표(국가채무, 재정수지)가 일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규범. 채무준칙·수지준칙·지출준칙·수입준칙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2020년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의 채무준칙과 통합재정수지 -3% 이내의 수지준칙)이 있으며 현재 법제화 추진 중.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에는 기여하나 재정유연성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음

□ 재정착각 財政錯覺 fiscal illusion

재정 부담과 편익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의 심리현상. 자신이 부담하는 세금에 비하여 편익을 적게 느린다고 생각하여 조세저항을 한다든지(Musgrave), 반대로 생각하여 조세저항을 하지 않는다든지(간접세 구조하의 재정착각) 하는 현상 (= 재정환상)

□ 재정치화 再政治化

행정은 정치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므로 다시 행정에서 정치적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1990년대 탈신공 공관리론이나 거버넌스 입장 (↔ 탈정치화)

□ 재정통제 財政統制 financial control

입법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사업계획에 관한 입법부와 국민의 의도를 게수로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부는 입법부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목적·기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확인·감시하는 것. 재정민주주의의 구현 수단. 배정·재배정 등이 그 수단

□ 재정투자심사제도 財政投資審査制度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업의 타당성, 자원조달능력, 투자우선순위 등을 사전 검토하여 권고의견을 제시하는 재정통제제도

□ 재평가 再評價 meta-evaluation

이미 실시된 자체평가의 결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 정부업무평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확인·검토 후 객관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 주민감사청구제도 住民監査請求制度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8세 이상 지역주민이 상급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주민(국민)개세주의 住民(國民)皆稅主義

모든 주민(국민)에게 예외 없이 세금을 내게 한다는 제도. 지방세 원칙 중 부담보편성의 원칙이 이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주민세 균등분이 이에 해당

□ 주민규칙개폐의견제출제도 住民規則開閉意見提出制度

주민들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을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

□ 주민만족도 住民満足度 citizen satisfaction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평가기준의 하나로 어떤 정책에 대하여 주민이 정치적으로 만족했는지의 여부. 유권자들이 선거나 투표를 통하여 어떤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지지하는지의 여부

□ 주민발안 住民發案 initiative

주민들이 조례의 제·개정 청구나 의안을 직접 발의하면 이를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직접발안, 지방의회가 결정하면 간접발안에 해당. 우리의 경우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가 결정하는 간접발안의 일종인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도입.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민발안은 불인정

□ 주민소송 住民訴訟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및 직원의 공금지출·회계 등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감사기관에 먼저 감사를 청구하고 그 감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법원(행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 우리의 경우 소송대상을 재무행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대표소송의 성격이 강함.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제도는 불인정

□ 주민소환 住民召還 recall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공직자의 파면을 주민이 요구하고 소환여부를 주민들이 결정하는 제도. 우리의 경우 투표에 의하여 소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환제도는 불인정

□ 주민자치 住民自治 citizen autonomy

주민에 의한 자치로서 영미형 자치방식.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며 주민참여적·지방분권적인 자치제도. 국가의 통치구조가 민주주의에 입각한 지방자치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국가의 위임사무도 없음(↔ 단체자치)

□ 주민조례청구제도 住民條例請求制度

주민발안(간접발안)의 일종으로 18세 이상 지역주민들이 당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우리의 경우 1999년 도입 (= 주민발안제도)

기이론, Y0이론 근거 (→ 상충모형)

(2) 정책집행론에서 하향식 집행과 상향식 집행을 절충한 모형(㉔) Sabatier와 정책지지연합모형 등)

□ 통합재정 統合財政 unified finance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물론 지방재정까지 모두 포함(총량라)하여 정부의 재정활동을 내부거래를 공제하고 예산순계기준으로 분류·파악하는 예산 (2005년 도입) (= 통합재정수지)

□ 통합전산환경 統合電算環境

정보자원을 분산관리함으로써 시설·인력의 중복투자, 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을 유발했던 종래 분산컴퓨팅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드웨어,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표준화함으로써 정보자원관리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관리방안. 클라우드 컴퓨팅도 통합전산환경의 일종. 행정시스템의 분권화에 기여

□ 통화정책 通貨政策 monetary policy

중앙은행이 통화량의 관리를 통하여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려는 정책으로 할인율정책, 공개시장조작, 지불준비율정책 등이 그 수단 (= 금융정책) (→ 재정정책)

□ 통화주의 通貨主義 monetarism

프리드먼(M.Friedman)을 대표로 하는 시카고학파의 경제이론으로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통화량 조절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입장

□ 퇴거규제 退去規制

시장에서의 생산 및 판매 등 경제활동을 그만두지 못하게 정부가 막는 현상으로 경제적 규제의 한 형태 (→ 진입규제)

□ 퇴직공직자의 의무 退職公職者~義務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퇴직공직자의 의무

- (1) 취업제한의무 : 퇴직한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취업할 수 없음(퇴직 5년전 직무관련성은 단지 규정). 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자와 동일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
- (2) 행위제한의무 :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음

□ 퇴직급여 退職給與 retirement allowance

최소 10년(2015년까지는 20년 이상)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60세(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사망 시 까지 지급하는 연금의 기본을 이루는 핵심급여로서 매월 [보수월액(총 재직기간의 평균기준 소득월액 X 총 재직기간 X 지급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퇴직수당 退職手當 retirement allowance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지급하는 수당. 전액 국가예산으로 지급(정부단독부담)

2024 김중규

VOCA

선행정학

2024판 발행 2023년 1월 31일

지은이 김중규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경영총괄 이수영
편집기획 김중규
편집디자인 박재상
마케팅 정민규
영업 이용혁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A동 103호
전화 편집문의 : 02-532-5280~1 영업문의 : 02-532-5314
팩스 02-532-5315

이메일 kspa9@hanmail.net
홈페이지 <http://kspa.co.kr>
동영상강의 <http://kspa.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delorean1985>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처에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교재 뒷 표지에 있습니다.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www.kaspa.co.kr TEL. 02-532-5280~1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3년 1월 31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A동 103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FAX. 02-532-5315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9 791192 405216

값 12,000원

ISBN 979-11-92405-21-6